

도내 의원들, 김영란법 “피하는게 상책”

민원성 청탁 “난감” vs “거절 명분”... 공익성 제3자의 고충민원 합법 vs 특정 단체·법인 지원요청 불법

도내 의원들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부러지게 아는 의원이 거의 없고 식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라는 것을 어렵게 아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당 3만원이하로 식사를 하거나 의원들끼리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하는 식이 접부다.

특히 첫 시행인 만큼 당분간 행동에 신

중을 기하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방의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성 청탁.

해당 지역 민원 해결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이 가장 손쉬운데 이마저도 못하게 돼 전전긍긍이다.

반면에 사방에서 쏟아지는 민원성 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

도 있다.

김영란법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한 광역의원은 “해결할 수 없는 청탁의 경우 서운해 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선거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 특히 각종 연줄과 압력으로 청탁을 들어줘야 했던 의원들로선 김영란법 덕택에 번거롭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민원을 거절할 수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출직 공익성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

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요청은 부정청탁으로 분류된다.

한 자치단체 의원은 “정당한 민원처럼 보이더라도 공익 차원의 민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어쩔수 없지 않겠는가. 당분간 사람 만나는 일은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광영 기자)

박주현 “국세청 고위직 절반 영남 출신”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중 영남 출신이 절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총 36명 중 영남 출신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영남 18명(50.0%),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 수도권 6명(16.7%) 순이었으며 강원과 제주 출신은 전무했다.

특히, 국세청의 핵심이라 불리는 조사국에 근무하는 총 11명 중 영남 출신은 6명(54.5%), 호남 1명(9.1%), 충청 2명(18.2%), 수도권 2명(18.2%)으로 확인됐다.

임용별로는 행정고시자가 41명(75.9%), 대학별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42명(77.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순=문정근 기자)

국회 교문위, 2015년 ‘국정감사결과 조치 보고서’ 발간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청)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냈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에서 피감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실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 작성했다.

또 점검결과 피감기관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지만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직 조치중이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담았다.

유성엽 의원은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42건으로 피감기관은 이중 1,478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점검한 결과 138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분야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조치완료비율의 과대평가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단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어렵다. 향후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년도에 걸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국정감사 준비 국정감사를 시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용호 “전국 학교건물 87.5% 지진에 무방비”

6만1757동 중 7727동만 내진확보... 경주지진 피해학교 218개교 중 92개교 내진시설 전무

전국 학교건물 87.5%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주지진 피해학교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23일 발표한 시도별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건물 6만1,757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727동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87.5%인 5만4,030동의 학교건물이 지진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6%로 학교건물 내

진시설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21.3%), 경기·광주(20.0%)가 큰 격차로 뒤를 이었다.

또 전남이 7.4%로 학교건물 내진시설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제주 8.3%, 전북이 8.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 전체 218개교 중 42.2%에 달하는 92개교가 교내 내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주의 경우 총 56개 피해학교 중 내진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학교가 37개교로 피해학교의

68%를 차지했다.

또한 218개 피해 학교 중 126개교는 학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내진시설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어 학교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용호 의원은 “학교의 내진확보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며, “내진시설 피해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천장이나 바닥, 벽, 조명 등과 같은 비구조물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순=이양원 기자)

이춘석 의원,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최근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민주사법연석회의와 공동주최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토론회의 장을 마련한 것.

이날 토론회에선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창수 대표(법원인사위원회)가 발제를 맡았고,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 주제와 관련해서는 ▲김도영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제를 맡고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와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가 토론자로 나왔다.

사법개혁이 법조계의 최대 화두인 만큼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등 각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이 났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춘석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 1만6천여 개 넘어”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정·추천·위촉할 수 있는 지리가 1만 6천여 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정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하여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리가 129개나 된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